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 RE300)' 사전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연다

호남권 최초 RE300 프로젝트 사전용역 결과보고회

2034년 'RE100', 2050년까지 'RE300' 달성 등 구성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
용역 결과 토대로 이달 중 대통령 보고대회 추진키로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이하 호남 RE300) 프로젝트' 용역 결과 보고회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 지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 영국 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늘려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도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2조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60조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3,358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생산유발 효과 387조6,86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 에너지공동체 RE300은 가장 낙후지역인 전라도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선도사업이자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만들게 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300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6명은 지난해 호남 RE300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로 결정하고 3개 시·도당이 각 광역단체에 프로젝트를 제안,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당 지도부와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

이낙연 전 대표, '일자리 주도 중산층 경제론' 제시
기술 · 그린 · 사람 · 포용 · 공정 등 5대 전략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이라는 5대 성장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차기 정부 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라며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김윤덕 의원
'민원 · 정책의 날'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이 '5월 민원·정책의 날'을 갖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사무소에서 전주시갑 소속 시·도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비롯해 입법,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간대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민원·정책의 날'에는 여러 건의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을 진행했으며, ▲가정폭력범죄 법안 건의, ▲의료인력 제도 개선, ▲지역구 숙원사업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김윤덕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구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주민이 요청하는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첨단 나노소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했다.

미래 첨단산업이 나아갈 길은?

우범기 정무부지사, KIST 전북분원 등 찾아 향후 방향 논의
산학연 파트너십 협약에 참석… 탄소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도내 나노소재와 탄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우 부지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을 방문하며, 미래 첨단산업의 어려운 점을 듣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 부지사는 첫 발걸음으로 첨단 나노소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태범)는 52명의 연구인력이 디스플레이, 전장 분야 등 전자·나노소재 기술 연구와 더불어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우 부지사는 나노 융합 기반 고도화사업, 나노소재 미래형 전자부품 상용화 R&D 지원사업, 첨단 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사업 등 전북도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 현황 청취와 더불어 주요 연구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 부지사는 임태범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와 6개 기업 대표들과 함께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 부지사는 임태범 전북지역본부장에게 나노소재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 산업의 고도화와 체질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들이 나노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부지사는 발길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으로 옮겨 산학연 파트너십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 부지사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 산학협력단장과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탄소기업과 대학은 전북분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연구 장비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전까지는 도내 탄소기업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 장비를 사용하려면 50% 할인을 지원받았으나, 이날 협약을 통해 75%까지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내 대학은 이날 협약을 통해 반값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의 우수인력과 지역기업을 1:1로 매칭, 기술사업화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 주치의 제도를 통해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 부지사는 "전북분원-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상생과 협력의 길을 보여준다"면서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발한 첨단 자동발열체크 키오스크를 전북도와 완주군에 기증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조선소, 구체적 해법 마련될 것"

민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자동차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해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친환경 전기차가 군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새만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군산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가 향후 기업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2조원 투자에 이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지역주도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과정에서 군산의 땅과 발전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산시민의 상실과 박탈을 야기한 이전 정치권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군산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산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안, 도의회 원안 의결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토론회 개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전주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의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고,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아동주거권 보장사업 집다운 집으로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아동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소감 발표와 김순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으로 참여한 이남숙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주시의회가 이들의 지원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축산농가 가업 상속으로 경쟁력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상속 ·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남원수학체험센터 이달 중순 착공

남원시 어현동 일대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이하 센터)'가 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6월 중순 착공에 들어간다.

강용구 의원(남원2·교육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 3월에 남원시로부터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 적합성 허가를 받았고, 시설공사 업체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건립비용과 관련해 지난해 남원시가 부지매입비 약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설계와 시설공사, 전시체험시설 등 약 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모두 통과됐다.

/유호상기자